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2. 4. 2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4월 20일(수) 10:35~17:29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71호~제90호 및 보고 제14호

이 명 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송 창 영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2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 2022년도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제8차,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71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72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73호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 의결안건 제74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3페이지에 ‘라. 기타 정비사항’으로 ‘유가·코스닥 시장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형평성·일관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스피·코스닥과 비교해서 코넥스 시장이 상당히 불리한 조항이 많이 있다는 의미인지?

- (보고자) 여기에서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음. 사업 보고서를 미제출하면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장요건을 이미 완화해 주었고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바로 상장을 폐지하였는데 이번 개정사항이 시행되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더라도 한 1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코넥스 시장의 현행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음. 또, 포괄적 주식교환 같은 것을 상장폐지 사유로 새롭게 추가해서 코넥스 기업들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였고, 재무내용 적용기준이나 정리매매기간 명확화 같은 것들도 이번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음.
- (위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신규 트랙 1은 질적심사를 일부 면제하고 신규 트랙 2는 그대로 실시하는데 질적심사의 내용이 경영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내용 외의 것들을 저희가 편의상 질적심사 요건이라고 하고 있음. 그래서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됨.
- (위원)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많은 투자자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투명성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더 많은 여파를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질적심사를 면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음. 결국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하지만 시가총액과 회사

의 질적인 요소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고자) 신규 트랙에서 면제되는 질적심사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 지속성이나 공익과 투자자 보호 적합성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시가총액 1,500억 원 이상, 지분분산 20% 이상, 일평균 10억 원 이상 거래가 된다고 하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또 별도의 질적심사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부 완화된 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위원)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건너간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 (보고자) 개장 이후 지금까지 83개 정도가 옮겨 갔음.
- (위원) 코스닥 시장하고 코넥스 시장하고 KOTC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보고자) 맞음. 가치평가가 낮으니까 기업들도 코넥스를 거쳐서 지분분산 하는 것보다 코스닥에 가서 높은 가치평가로 지분분산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한국거래소와 비상장주식플랫폼, KOTC, 코넥스, 코스닥을 연결하는 체계를 봐서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도 하고 연결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보겠음.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75호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재절차 개시 보류 조건을 달았는데 (주)뮤직카우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용해서 사업을 재편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혹시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지?

- (보고자) 일반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이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투자자 보호 체계는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들도 납득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일단 전달받은 상태임. 다만,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 모든 조건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이나 광고 집행을 못할 경우에 이 사업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도 이것이 불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자신들은 6개월이라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이것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이것이 발표가 되면 이런 유사한 건들과 관련해서 시장 반응이 어떨 것 같은지?
- (보고자) (주)뮤직카우는 것이 굉장히 큰 플랫폼으로 성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증권성 판단을 해서 이 영업이 불법화됐을 경우 영업중단이 된다는 것에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은 사실임.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주)뮤직카우의 투자자 보호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이런 新성장 사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서 이 사업을 당장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런 조건들의 정당성을 잘 설명하면 이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의견일치는 형성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다른 조각투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요구가 물밑듯이 있을 것 같아 금감원과 같이 준비하고 있음.
- (위원) 이것이 발표되면 일차적으로 금감원 쪽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임.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금융위 자본시장과와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여러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혹시 판단이 잘 안 되고 부담이 되는 건이 있으면 금융위와 협의를 해서 증선위에 바로바로 안건으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4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대한 해석에 실무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함. 소관 부처에 의견 조화를 할 경우 물권이나 준물권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어딘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데 신종 형태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어디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으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특히, 금감원에 많은 질의가 들어올 것 같음.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초반에 가르마를 잘 타면 그 뒤의 유사사례들을 정리할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함.

○ (참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각투자 대상이 되는 실물이든 권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보고서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음.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 금융위·금감원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게 설정해 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이 점 참고하셔서 향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

리면, 샌드박스(sandbox)라는 것은 한정을 지어 놓고 그 안에서 테스트를 해 보는 것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확인해보고 부정적인 측면은 이리이러한 조건을 달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정규 제도화로 가는 것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나중에 금융규제샌드박스 심사하실 때도 테스트를 한다는 그 원래의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아주 제한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76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지난번에 논의할 때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 잘 반영되어 있음. 동의함.

○ (위원) 저도 동의함.

○ (위원) 저도 증선위의 요청에 따라 새로 검토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함.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일반 증권회사 직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제재를 해왔고, 제재를 결정하는 감독당국에 있는 직원들은 증권회사 직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재해 온 것이 사실

임. 이번 사례(case)를 계기로 해서 동기가 전혀 ‘고의’도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면서 치유하려는 노력을 하는 등의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이번에 만들어진 선례를 참고하여 금감원에서 판단해도 좋을 것 같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7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1]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 다양화’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정제외점수 부과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 (보고자) 제일 중요한 것은 등록요건 유지의무, 특히, 통합법인이라든지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들이 나왔을 때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음.

○ (위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의 합리성을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 것인지?

- (보고자) 자율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한공회의 의견

을 들어서 지정취소 안건을 작성해야 하므로 걱정하시는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을 세부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78호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79호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0호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1호 『한울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2호 『한미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3호 『삼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4호 『광교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5호 『이춘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6호 『대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7호 『정인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8호 『성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89호 『인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 의결안건 제90호 『동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통상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감리하면 위법사항도 몇 개 조치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는지?

- (보고자) 저희가 감사인 감리 갔을 때 품질관리 이외에 독립성 위반 등이 일부 있었음.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로 안전을 작성하여 보고드릴 예정임.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11시56분 정회)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14시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91호 『(주)○○○○○○○○, (주)○○○○○○○○(舊(주)○○○○)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0호 『○○○○(주)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 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2호 『회계감사기준 개정안』을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기준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5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0년도 감사반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6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0년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7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18호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같음함.

○ (위원)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보고자) 연차재무제표상에서는 2022년 기초에 들고 있는 모든 콜옵션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 같고, 평가했던 기존의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 쪽으로 반영을 하고 올해 발생하는 부분은 올해의 당기손익으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96호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의 (가칭)알파브릿지(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97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이 미공개중요정보 공시된 내용이 자율공시로 진행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사료가 되고, 공시한 내용도 ○○○○로부터 수주해서 출자를 한다는 굉장히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음. 피조사자가 총 17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 정보전달 경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심. 이중에서 □□□ 사원과 ●●● 과장, ◇◇◇ 대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사원의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공시한다는 내용을 듣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미공개정보 이용 사실을 자백한 분임. 그리고 취득은 했으나 매도한 사실은 없고 1,800주를 현재까지 전부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과장과 ◇◇◇ 대리의 경우에는 수주출자 공시 관련된 업무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정보취득 경위도 확인된 것이 없음. 저희가 법리적으로 볼 때 중요정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법인의 경영, 재산 등에 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여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보여야 되는데, 단지 좋은 소식이 있다, 예전 것인데 수주한 것이 있다는 정보만으로 미공개중요정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함.

○ (위원) □□□ 사원은 다 시인을 했는지?

- (보고자) □□□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진술을 할 당시 최초에는 “공시 당일 오전에 이미 재경본부 내에 공시한다는 사실이 다 퍼져있었고 내용까지 다 퍼져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음.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진술을 약간 번복을 했는데, 저희 생각에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진술을 한 것이 다른 직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번복할 때는 “사무실에서 공시를 한다는 얘기가 들렸고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공시, 공시라는 말이 들려서 ‘아, 오늘 공시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다.”고 진술을 번복했음. 아무튼 공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을 산 것은 맞다고 얘기를 했으며 □□□가 유일함.

○ (위원) 구체적 공시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음.

○ (위원) 미공개정보냐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주)○○○○○에게 ○○○로부터 수주사실은 일반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왜냐하면 (주)○○○○○은 ■■■■■의 1차 벤더(vendor)로서 매출액의 대부분을 ■■■■■가 차지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2019년도에 한번 ▼▼▼▼ ▼▼▼와 관련해서 수주를 한 적이 있으며 단발 수주였음. 그런데 202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함. 그래서 ○○○ 현지에서 생산공장 확충이 필요해서 추가출자를 한 것임. 이런 사실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게 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음. 그리고 실제 주가도 공시된 직후에 30% 가까이 상승했으며 거래량도 전일거래량 대비 1,0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음.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음.

▶ (진술인) 저희 대상자가 18명이고 미공개정보이용은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회사 내에 소문이 돌았던 것 아니냐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음. 저희가 말씀드렸던 ●●● 과장이나 ◇◇◇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카톡도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임.

- (참여자) 17명이나 고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몇몇 소수 매수자 분들을 선처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선처라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니면 향후에 그런 행동을 안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것이 없음.

▶ (진술인) ●●● 과장이나 ◇◇◇ 대리인 경우에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 전혀 알지 못했고 이것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산 것이 아니라 관련주가 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잘 아는 회사 주식을 샀다고 얘기하고 계시고, 주식 거래 규모도 평소에 약간 소액 거래를 하시던 분들이 (주)○○○○○○도 30몇 주 산 것인데 이것을 미공개정보이용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함. 거래 규모도 너무 소액이고 명확하게 증거가 확인된 것도 없고, 이분들이 담당하는 업무 자체도 출자나 공시나 이런 수주하고 관련이 없는데 이런 분들까지 고발되어야 하겠느냐는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대규모로 연루된 사건인 것 같음. 비록 소액이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290호(2021) 『(주)에이프로젠메디신 등 2개사 주식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추가 확인서를 확보하지 못했음. 그렇지만 제가 서면으로 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도 조합원 숫자가 6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음.

○ (위원) 대상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으셨던 것인지?

▶ (진술인) 각각 조합의 조합장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진술서를 써 주었을 때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해 주겠다고 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증권신고서가 미제출된 경우 과연 발행인 회사 이외의 매출인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

항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금감원의 사전통지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건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은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으로서 같은 법 제125조제1항 각호에 있는 자들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음. 각호의 행위라는 것은 제1호와 제2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호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거짓기재를 하거나 중요부분을 누락하는 행위이고, 제2호의 경우에는 아예 증권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것임. 그리고 제125조제1항 각호에 있는 자들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1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거짓기재를 하거나 중요부분을 누락했을 때 관계된 발행인 회사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열거를 하고 있음. 물론 여기에도 매출인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제7호에 있기는 한데 그 경우에도 역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매출신고를 했을 경우의 매출인을 의미함. 따라서 증권신고서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 제125조제1항 각호, 다시 말해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 제429조제1항제2호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따질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음. 그런데 법 제429조제1항제2호를 보게 되면 ‘2.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음.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119조를 살펴보면, 제119조에 명백하게 증권신고서 제

출의 의무자는 발행인 회사로 되어 있고 그 어디에도 매출인을 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지금 관계되어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 어디에도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매출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사전통지서가 왔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추측을 해 본 결과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 중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에 관련된 조항이 그나마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 근거조항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임. 거기를 보면 ‘다. 법 제429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자(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음.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와 아예 제출이 안 된 경우 당연히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신고의무자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매출신고의 경우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말이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도 매출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소유자인 매출인을 포함하는 것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함. 다시 말해서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끊어지고 다시 ‘매출신고의 경우’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고서 제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매출신고인 경우에는 매출인, 다시 말해서 유가증권의 소유자도 포함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발행인 회사는 물론이고 그 신고의무자 안에는 매출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될지 다소 헷

갈리는 부분이 있음.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이것은 구분해서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만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발행인만 의미하고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이 매출신고의 경우에는 매출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만일 그렇지 않고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발행인뿐만 아니라 매출인도 신고의무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위 법령인 자본시장법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것임.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행정입법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라는 것이 있음. 지금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위임에 관련된 근거조항이 법률에 존재해야 됨.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어디에도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매출인을 포함한다.'거나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없음. 따라서 만일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이런 자본시장업무규정 별표2에 따라서 매출인까지 확대해서 포함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당연히 위법 무효한 규정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신고의무자를 새로이 하위 법령에 창설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고의무자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나와 있듯이 발행인 회사임. 그런데 아무리 그 주식의 소유자이고 설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발행인 회사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의무자로서 규정을 한다면 자기

가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을 이행강제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의무자가 발행인인 것이고 매출인은 그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매출인을 포함하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음.

- (보고자) 법에서는 아닌데 하위 규정에서 매출인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법률대리인에게서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 제429조를 보면 명확함. 매출의 경우 그리고 매출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발행인뿐만 아니라 매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과거 법원의 판례 그리고 증선위에서의 사전 의결했던 전례들이 충분히 있음.

- ▶ (진술인) 지금 조사국에서 말씀하신 자본시장법 제429조제1항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429조를 보게 되면 ‘①금융위원회는 제12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거기에 보면 제1호와 제2호가 나와 있는데 제1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내용에 있어서 거짓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이고 제2호가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임. 그러면 지금 조사국에서 말씀하시는 매출인도 포함된다는 규정은 이 자체로서는

알 수 없음. 제125조제1항 각호를 봐야 됨. 거기에 ‘증권 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 함으로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에 있는 제1호부터 제7호를 보게 되면 이 법문(法文)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임. 그 점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는 제7호에 나와 있는데 제7호를 보면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임. 이 법문은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매출의 방법, 다시 말 해서 구주를 팔은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임. 그 법문에 나와 있는 것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7호에 관련된 것도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으로 되어 있음. 매출신고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잘 아는 매출인이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부분을 누락하면 그 매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임. 그렇지만 지금 여기 제125조제1항 어디에도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없음. 따라서 제429조제1항제2호 ‘아예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제42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라고 되어 있음. 증권신고서는 제119조로 봐야 되는데 제119조를 보시면 너

무나 잘 아시다시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발행인 회사’로 되어 있음. 주주가 발행한 발행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매출인이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부과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없음.

- ▶ (진술인) 저희가 처벌을 받게 되면 투자자 수를 알 수 없는 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나 사모펀드 그리고 그쪽에 컨소시엄으로 해당되는 잠재적 매수자와 M&A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왜냐하면 50인 이상 투자자로 구성된 집합투자자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라는 것을 지키려면 M&A 거래가 굉장히 어렵게 됨. 그 이유는, 증권신고서는 일반적인 공시에 비해 굉장히 자세하고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또한 가격 등이나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그리고 투자조합들이나 경영권에 투자하는 사모투자기구들 그리고 외국계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들은 사실상 실제로 투자자수가 몇 명에 달하는지 저희 한국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통해서 신고나 정정신고를 계속 해야 되는 의무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움. 협상 과정에 주요사항들이 드러날 경우 비밀유지가 곤란한 점, 그리고 계속되는 변경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혹시나 시세조종혐의로 나중에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함.

- (위원) 이것을 제재한다고 앞으로 거래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사전에 미리 다 알려져 있는 규제에 대하여 시장의 참가자로서 그런 부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어버린 변론이 아닌가, 그런 항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 ▶ (진술인) 기본적으로 사모와 공모, 50인이라는 기준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했음.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합에 누가 얼마를 넣어서 결국 64인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그 투자조합의 계좌를 전부 다 달라고 해야 되는 상황 밖에 안 됨. 그런 경우 과연 현실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주겠느냐,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과연 그 외국에 있는 PE의 진실된 실질적인 LP의 숫자가 50인 미만이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들을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임.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지금 대리인 ◆◆◆◆ 쪽에서는 제125조제1항 본문에 나오는 ‘거짓기재, 중요사항 미기재’를 끌고 와서 억지성 주장을 한 것임. 제125조제1항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기재,

중요사항 미기재’는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임. 그런데 지금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규율하고 있는 법 제429조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을 때 그 조치대상을 매출인까지 포섭하고 있는 조항이어서 법무법인 ◆◆◆◆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함. 그 증거로서 판례가 있음. 그 판례를 저희 금감원 공시설명자료에 그대로 담아 났고 거기에 보면 ‘발행인뿐만 아니라 매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 (위원) 알겠음. 진술인 주장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금감원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음.
- (보고자) 최근 투자조합 그리고 사모펀드, 외국계 프라이빗에쿼티(Private Equity) 등을 통한 M&A가 종종 많이 일어나고 있음. 이 투자조합의 사람들도 50인이 넘으면 공모 규제를 받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해야 함.
- (위원장) 제290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아울러 투자조합과 관련하여 증선위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음. 모집 매출 상대방이 조합인 경우에 발행인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부분이 일부 일리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금융위 소관 과와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인 발행인이 조합원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증선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9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금지 등 위반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29분 폐회)